"北 6자회담 조기 재개 희망"

中 신화통신 보도… "김정은 후계 공고화 대내외 안정 필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방중 이후 북핵 6자회담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일단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정체상태인 6자회담 재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6자회담과 관련한 김 위원장의 과거 태도에서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6자회담을 강하게 희망하는 것은 최근 식량난 등으로 위기가 커진데다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를 공고화하려면 대·내외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지난달 16~18일 북한을 방문한데 이어 한국, 일본, 미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우다웨이 대표는 관련국들에게 북미 접촉 → 6자 예비회담 → 6자 본회담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양국의 움직임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대북 제재기조에서 대화 국면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다소 유연성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천안함 제재국면'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한국, 미국과 중국, 북한은 첨예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반면, 북한과 중국은 빨리 예비회담에 착수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한국과 페루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최종 타결한 가운데 양국 통상장관이 페루 대통령궁에서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페루 FTA 타결

한국 대형차·컬러TV 즉시 관세 철폐

한국과 페루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은 이날 페루 수도 리마에서 가진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FTA협상을 타결하고 페루 대통령궁에서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은 이날 열린 장관회담과 제5차 협상을 통해 상품과 무역구제,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협력 등 경제·통상분야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타결 내용은 25개 장으로 구성된 협정문에 담겼다.

두 나라는 우선 상품시장 개방과 관련,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페루로 수출하는 컬러TV와 배기량 3천cc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뒤 즉시 철폐되며, 1500~3000cc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수출용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 10년 내에 철폐된다.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 측 민감 품목인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FTA협정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으며, 그 외 202개 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후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오징어 중 비중이 큰 냉동·조미·자숙의 경우 10년 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페루에서 수입되는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며,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 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연합뉴스

손학규 '불가론'에 개헌 논의 삐걱

"차기 정부서 논의돼야"

여권발(發) 개헌논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개헌 논의에 대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당권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이명박 정부내 개헌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손 고문은 지난달 30일 부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차기 대권 주자가 입장을 밝히고 여론을 수렴한 뒤 차기 정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정권연장의 술책인 여권의 개헌 시도에 야권이 야합하는 행위가 있다면 민주세력의 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고문은 '야합세력'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의원 등 정세균 전 대표의 지지그룹과 호남 기득권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손 고문 측에서는 이들 주류가 어차피 집권하지 못할 바에 한나라당 친이계와 결탁, 이원집정부제 같은 분권형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김 전 의장과 정 전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켰다는 얘기도 나온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재균 일자리 전도사 광폭 행보 주목

"고용 없는 성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입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과제인 만큼 국회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국회 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이하 '일자리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의 광폭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우선 광주·전남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지역의 열악한 고용여건을 지적하며 여론 환기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역의 지난 10년간(2000년~2009년) 평균 청년실업률은 9.6%로 전국 평균 7.5%보다 무려 2%포인트 이상 높고,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3년 연속 꼴찌에서 두 번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6위는 대구)"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숫자에서부터 수도권과 지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액수도 광주는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광주보다 지원실적이 저조한 광역자치단체는 강원과 제주뿐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에는 광주고용노동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광주지역의 일자리 현황을 청취하고 민원상담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들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특별기고

이건철

서울·인천·경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44명이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금년 정기국회에서'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이렇다. 1982년 제정되어 수도권에 피해를 끼쳐 온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들을 폐지하여 수도권에는 더 많은 자유를, 지방에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이 논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수도권이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자. 수도권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이 감소했어야 한다. 결론은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은 지속적으로 팽창해 왔다. '82년 당시 전국 인구의 36% 수준이던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은 1.5배 증가한 수준인 50%에 가깝고, 지역내총생산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발전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나 신산업은 9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마디로 인구수, 고용기회, 지역총생산, 중추기능의 지배력 등에서 수도권은 하나의 '섬(island)'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이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었음에도 지난 28년간 피해를 보아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왜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정부가 '국가총량지표 증대를 명분으로 당장의 수요와 경제적 논리만을 추구한 나머지「공장건축총량제」등 실효성없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도권 규제를 가장 강하게 규제했다는 참여정부 때에도 8개 첨단업종에 대해 수도권의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8개 첨단업종에 국한한다는 조건이었지만, 미래신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입지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했다. 그리고 신정부 들어서는 수도권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그린벨트를 해제/완화하여 충분한 토지를 확보하고, 공장총량제를 더욱 완화하여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 허용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산업인력 확보를 위한 대학까지 독차지하려는 욕심을 내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우리 국토는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과 소외로 허덕이는 지방이 병존하는 기형적 공간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토지 및 주택부족 등 집적의 불이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지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발효되고 있는 지금도 경제위기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국민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통합은 지역간, 계층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최소화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마침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공간적·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과 사회정의 실현을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친서민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공간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만 소홀한 듯하다.

'수도권 계획 관리법' 철회돼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도권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은 '사회정의' 구현을 최우선순위로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제안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당장의 편익만 생각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집중의 근본적 연결고리를 차단시켜 지방경제 살리기에 대한 지혜를 모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끝으로 수도권에 비해 산업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그나마 수도권 규제로 기업유치를 통해 침체와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 수도권 규제 마저 풀린다면, 지역경제발전은 기대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 확실하다. 공간적 이기주의를 통해 지역경제에 커다란 충격과 좌절감을 안겨주지 않기를 바란다.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